

적극행정 YES vs. 소극행정 NO

◆ 10.28일 금주의 사례

소극 행정	<p>(Bad) 지침개정 업무를 방치하여 규제개혁에 역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OO구는 권익위로부터 “주차위반 차량 견인 중 파손시 피해구제 방안 마련”과 관련된 내용의 지침을 ‘17년 3월까지 개정 권고를 받았으나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담당 공무원은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검토 없이 지침개정 업무를 방치하는 등 업무를 해태 → 그 결과 차량 견인으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 지속
------------------	---



적극 행정	<p>(Good) 관련규제 개선으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의 기반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경기도 안양시 소재 S사는 무인중형전기버스 인공지능(AI) 개발을 위한 실험차량이 안전기준 자기인증 요건에 맞지 않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실험을 위한 임시운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기술고도화에 애로가 있었음 ○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 조윤주 주무관은 ‘17.10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S사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, 소관부처에 규제해소를 건의했으나 불수용 □ 그럼에도 조주무관은 포기하지 않고 <u>관련 법령, 자율주행 기술 등을 학습하면서 10여 차례 다양한 전문가·개발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건의내용을 충실히 보완</u>하여 국무조정실, 행정안전부 등에 10여 차례 규제 해소를 건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에 소관 부처는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자기인증 면제서 발급하였고 일반적으로 임시운영 허가도 승인함 <p>☞ ① 자율주행 버스가 서울 월드컵북로 1.1킬로 구간은 운행함으로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계기 마련</p> <p>② 해당 기업은 연 1,000억원 매출과 3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, 150여개 자율주행 관련 산업군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</p>
------------------	---